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8다93117 양수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94702 판결
판 결 선 고	2009.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521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06 판

결 등 참조), 자백한 당사자는 물론 당해 심급과 상급심 법원도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이에 구속된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4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사업권을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소외 2에게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위로금 또는 사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1억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소외 2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2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과 일치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제1심도 이러한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원심도 이에 구속되는 것이며, 나아가 위 1억 원의 지급약정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무조건으로 소외 2에게 1

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이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

 대법관 이홍훈 _____

주 심 대법관 김능환 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